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 2027년까지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대표기업 300개 육성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 운영
- 정부(지방중기청), 지자체,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원팀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발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은 6일 목요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14개 비수도권 광역 시·도의 지역주력산업(48개)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기업 공급망을 고려하여 주축산업(41개) 및 미래 신산업(19개)으로 개편·조정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중소기업 육성

첫째,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우선,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단계를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역 주도로 단계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성장전략에 맞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혁신성과 성장성, 고용창출역량 등이 최상위 수준인 ‘선도 기업’에는 해당 산업의 전후방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신기술 기반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2027년까지 주축산업 분야에서는 280개의 선도기업을 육성·지원하며, 단일 지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수소,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선도기업’ 20개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대표기업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지원기관이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성장프로젝트 300’을 추진한다. 정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의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지역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성장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300개의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등 융복합 시대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100개의 전주기 협업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협업의 전략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기획부터 기술 및 제품개발, 사업화, 생산·유통까지 협업활동 전(全)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는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지역 고유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성장 생태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협력하여 조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바이오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대형 병원,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이 모이는 인천 송도의 ‘K-바이오랩 허브’ 사례와 같은 ‘지역특화 창업·벤처 벨리’ 조성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재대학*’ 지정, ‘네트워크론**’ 도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등 인력·금융·수출 분야의 지원시책들도 도입·개선한다.

- * 지역중소기업의 수요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전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을 운영하는 주관대학
- ** 협력기업이 납품발주서를 기반으로 운전자금을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이를 상환하는 단기 정책자금

또한, 지역을 신산업의 요람이 되는 규제혁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실증기간 확대, 특구 후보제도 도입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선진적인 규제 환경과 글로벌 진출 특화 실증 체계를 갖춘 ‘글로벌혁신특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체계의 고도화

지역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여 위기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위기에방계획 수립부터 위기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까지 이어지는 지역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 *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경기동향 및 기업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위기에방계획 수립 지원과 위기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등을 수행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구조혁신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이 필요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도 강화한다.

- * 신산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통합 지원(컨설팅, 자금, 사후관리 등)하는 전담기관

또한 농공단지, 지역특구 등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

정부, 지자체,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원팀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하나로 뭉쳐 ‘원팀(One-Team)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혁신기관들과 ‘원팀’이 되어서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화 (044-204-7570)
		담당자	서기관	황선희 (044-204-7571)
			사무관	장용희 (044-204-7572)

